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세무2과-2626
등록일자	2016.1.22.
결재일자	2016.1.22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지방소득세2팀장	세무2과장	기획경제국장		
조삼숙	윤미라	김광수	전결 01/22 김용운		
협조자					

- 2017년부터 전면 개편 시행되는 지방소득세법 세정지원을 위한 -
개인 지방소득세 주민 설명회 추진 계획

■ 사업개요

○ 현 황(2015년) :

- 신고 건수 : **123,231건**(중소105,424건 양소17,807건)
- 신고 세액 : 236,413백만원

○ 변경내용 :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신고특례	소득세와 동시 신고	지방자치단체 별도 신고	2017년 시행
신고불성실가산세	해당없음	무신고 가산세 20% 부과	2017년 시행
탄력세율	해당없음	표준세율 50% 가감	시 조례

○ 문제점 :

- 개인 지방소득세는 법인과 달리 대리인 신고 부재로 법령 개정 사항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많은 민원 발생과 큰 혼란 야기 예상

○ 홍보강화 :

- 개인 지방소득세 주민 설명회 개최(2016년 9월 ~ 12월 하반기)로 개정 법령 시행 전 충분한 사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납세자 혼란 최소화

2016. 1. 25.

강 남 구
 (세 무 2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<p style="color: green; font-weight: bold;">관련 규정 및 근거</p>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p>▸ 지방세법시행령 제95조 【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】</p>
<p style="color: green; font-weight: bold;">추진 경위</p>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p>▸ 2017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(종합소득·양도소득) 신고납부 방법이 전면 개편 시행됨에 따라,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세마찰과 납세자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.</p>
<p style="color: green; font-weight: bold;">예산 사항</p>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p>▸ 해당사항 없음</p>
<p style="color: green; font-weight: bold;">수혜자 및 범위</p>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 <p>▸ 해당사항 없음</p>
<p style="color: green; font-weight: bold;">분야별 검토사항</p> <p style="color: green;">[계속 : ○] [신규 :]</p>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p>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)</p> <p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○)</p> <p>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)</p> <p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)</p> <p>⑤ 시장조사 ----- ()</p> <p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)</p> <p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○)</p> <p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)</p> <p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)</p>
<p style="color: green; font-weight: bold;">타 기관 사례</p>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p>▸ 해당사항 없음</p>
<p style="color: green; font-weight: bold;">전문가 자문</p>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 <p>▸ 해당사항 없음</p>

- 2017년부터 전면 개편 시행되는 지방소득세법 세정지원을 위한 -

개인 지방소득세 주민 설명회 추진 계획

2017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(종합소득·양도소득) 신고납부 방법이 전면 개편 시행됨에 따라,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세마찰과 납세자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.

I 사업 개요

○ 현 황(2015년) :

- 신고 건수 : 123,231건(중소105,424건 양소17,807건)
- 신고 세액 : 236,413백만원

○ 변경내용 :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신고특례	소득세와 동시 신고	지방자치단체 별도 신고	2017년 시행
신고불성실가산세	해당없음	무신고 가산세 20% 부과	2017년 시행
탄력세율	해당없음	표준세율 50% 가감	시 조례

○ 문제점 :

- 개인 지방소득세는 법인과 달리 대리인 신고 부재로 법령 개정 사항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많은 민원 발생과 큰 혼란 야기 예상

○ 홍보강화 :

- 개인 지방소득세 주민 설명회 개최(2016년 9월 ~ 12월 하반기)로 개정 법령 시행전 충분한 사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납세자 혼란 최소화

II 중점 추진내용

○ 추진방법 :

- 4개 권역(1~2권역 : 각 5개동, 3~4권역 : 각 6개동 - 22개동)별 맞춤형 설명회 실시 ⇒ 통·반장 교육, 현장데이트, 안보교육과 연계 실시
- 동주민센터 4개권역 순회교육 실시 ⇒ 과급력이 큰 통·반장 활용 ⇒ 자치행정과 주관 권역별 통·반장 교육(11월~12월)과 구청장과 함께하는

현장 데이트(하반기)와 연계 실시

⇒ 총무과 주관 권역별 안보교육과 연계 실시(연중-미정)

⇒ 통·반장 시스템 활용, 반상회와 연계 교육자료 배부 및 현장중심 교육 실시

- 시행시기 : 2016. 9월 ~ 2016. 12월 집중 실시로 개정법률 시행에 대비
- 예상 인원 : 1,600명(회차별 200명 × 총 8회)
- 강사 : 지방소득세 팀장(5명) 및 업무총괄 주임 및 부서장
- 2016년 9월 세부 계획수립 및 설명회 교재 제작·배부

○ 교육내용 :

- 지자체에도 반드시 신고토록 개정된 내용 집중 교육 ☞ 20% 무신고 가산세
- 공제·감면도 자동감면에서 ☞ 국세감면 내용과 동일하게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별도 규정함에 따라 신청주의로 변경된 내용 교육
- 전자 납부시스템(etax, wetax)을 통한 간편 신고납부 방법

○ 추진일정 :

- 2016. 9. 10. 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 수립
- 2016. 9. 15. 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방법, 주요개정 내용 등 자료 정리
- 2016. 9. 20. 『개인 지방소득세, 이전 세무서와 별도로 구청에 꼭 신고하세요』
(가칭) 배부용 교재 제작
- 2016. 9. 21. ~ 12.23. 주민 설명회 개최 및 전방위적인 홍보방안 강구

III 월 별 계 획

월별	세 부 추 진 계 획	비 고
9월	▶ 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 수립 ▶ 신고·납부 방법, 무신고가산세 신설 등 주요개정 내용 등 자료 정리, 교육용 교재 제작	
9월	▶ 현장 데이트 행사시 1·2권역 설명회 실시 ▶ 통·반장 활용 반상회 홍보자료 배부 및 교육 실시	
10월	▶ 현장 데이트 행사시 3·4권역 설명회 실시 ▶ 통·반장 활용 반상회 홍보자료 배부 및 교육 실시	
11월	▶ 통·반장 교육시 1·2권역 설명회 실시 ▶ 통·반장 활용 반상회 홍보자료 배부 및 교육 실시 ▶ 교육 자체평가 및 다각적인 홍보방안 도출	
12월	▶ 통·반장 교육시 1·2권역 설명회 실시 ▶ 통·반장 활용 반상회 홍보자료 배부 및 교육 실시 ▶ 교육 자체평가 및 다각적인 홍보방안 도출	

IV 기대 효과

- 법령 개정 시행전 충분한 사전 홍보 실시로 민원예방 및 납세자 혼란 최소화
-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이중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 공감 및 해소
- 사전 홍보 철저로 징수율 제고 및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

V 향후 대책 및 개선점

-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어 신고 유예기간이 추가 연장될 가능성 상존
 - 현재 지방세법 부칙 13조【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】로 2016.12.31.까지 3년 신고유예됨
 - ☞ 2016.1.15. 행정자치부 주관 시·도 합동회의에서 신고유예 재논의
- 현행법대로 2017년부터 지자체에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구축된 홈텍스 전자신고와 연동하여 홈텍스에서 클릭 한번으로 지방세 신고가 가능토록 기능유지 및 추가 간편 신고 프로그램 전산개발 행자부 및 시에 건의 예정